

영국 UNITED KINGDOM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양형 기준 10월부터 시행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최근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성범죄' 유포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양형 기준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익명을 보장해 2차 피해를 막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서명 활동도 벌어지고 있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올해 7월 발표한 '협박성 범죄(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양형 기준'에 따르면, 연인과의 성관계 등이 담긴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이들은 10월 1일부터 최대 2년 형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양형위원회(Sentencing Council)는 판사가 선고할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영국 사법부 소속의 독립 기구다. 영국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2015년 형사사법 및 법정에 관한 법(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개정 이후 정식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양형위원회 위원인 로사 딘 판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범죄들이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며 디지털 성범죄 범죄 가해자를 겨냥해 양형 기준을 마련한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성희롱, 스토킹, 연인이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강압적 통제, 살인 위협 등 범죄도 최대 2년형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특정인을 괴롭힐 의도로 가짜 소셜 미디어 계정이나 웹사이트를 만든 뒤,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나 연락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에서 디지털 성범죄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올해 6월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크다. 영국의 인기 데이트 리얼리티 쇼인 'Love Island'의 출연자인 자라 맥더모트(Zara McDermott)와 로라 앤더슨(Laura Anderson)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당시 영국에서 큰 파문이 일었고, 올해 7월 양형위원회는 강력한 양형 기준을 시행했다.

참고자료

- Sentencing Council(2018)
"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Intimidatory-Offences-Guideline_WEB.pdf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Sentencing Council(2018)
"Sentencing guidelines for intimidatory offences published",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news/item/sentencing-guidelines-for-intimidatory-offences-published/>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Nomorenaming(2018)
<http://www.nomorenaming.co.uk/campaign/>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The Guardian(2018)
"Courts get punishment guidelines for revenge porn offences"
2018년 7월 5일자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jul/05/courts-get-punishment-guidelines-for-revenge-porn-offences>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새 양형 기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범죄 행위 중 처벌 수위가 높은 것은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위'이다. 이와 함께 1)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을 최대화 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2) 범죄의 정교한 계획 3) 광범위하게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등 여부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영국 잉글랜드 노스요크셔 주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이름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자는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이 지역의 자치경찰위원장인 줄리아 멀리건이 #Nomorenaming이라는 이름으로 펼치고 있는 이 캠페인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익명성을 보장받아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만 명을 목표로 한 이 서명 운동은 10월 11일 기준(영국 시각 기준)으로 15만 782명이 서명했다. 줄리아 멀리건 자치경찰위원장 North Yorkshire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은 “언론과 소셜 미디어, 인터넷 상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이름이 수시로 거론되면서 이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같은 범죄를 ‘성적인 범죄(sexual offence)’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https://you.38degrees.org.uk/petitions/change-the-law-no-more-naming-of-revenge-porn-victims>
접속일자, 2018년 10월 10일

30세 이하 여성 5명 중 1명, “남녀 임금 차별 겪었다”

황수영 브리스톨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과정

영국 30세 이하 여성 5명 중 1명이 남성 동료와 똑같이 일하고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저소득층 여성 지원 단체인 영위민스트러스트(Young Women's Trust)가 9월 13일 발표한 연간 보고서인 'It's(still)a rich man's world: Inequality 100 years after votes for women'에 따르면 30세 이하 여성 응답자 중 19%가 남성 직장 동료와 같은 일을 하고도 더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미투 운동' 등 여권 신장 운동이 활발한 지금에도 상당수 영국 여성들이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설문조사는 영위민스트러스트가 올해 6월 29일부터 7월 16일까지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18~30세 4,0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녀 임금 차별을 가장 많이 겪는 여성 연령층은 25~30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30세 여성 응답자 중 “남성 동료와 같은 일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고 답한 이들은 19%였지만, 25~30세 여성 응답자로 연령 기준을 좁히자 4명 중 1명꼴인 25%가 “그렇다”고 답해 18~30세 여성 평균보다 6% 포인트 더 높았다. 또한 30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불안한 고용 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다고 답한 젊은 여성 응답자는 전체의 20%지만,

참고자료

- Young Women's Trust(2018)
“Millions of young women being let down in workplace, despite #MeToo and gender pay reporting, says major new report”
https://www.youngwomenstrust.org/what_we_do/media_centre/press_releases/849_millions_of_young_women_being_let_down_in_workplace
(접속일자, 2018년 9월 28일)
- Young Women's Trust(2018)
“It's(still)a rich man's world: Inequality 100 years after votes for women”
https://www.youngwomenstrust.org/assets/0000/9913/lt_s_still_a_rich_man_s_world_-_web_report.pdf
(접속일자, 2018년 9월 28일)

같은 연령층 남성은 전체 응답자 중 16%가 그렇다고 답해 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높았다.

또한 “제로아워 계약(Zero-Hour Contract)을 맺고 근무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 역시 여성이 남성을 앞섰다. 제로아워 계약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젊은 여성이 39%, 젊은 남성이 32%인 것으로 나타나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일하는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7% 포인트 높았다. 제로아워 계약은 정해진 노동시간 없이 임시로 계약한 뒤 일한 만큼 시급을 받는 것으로, 최소한의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을 보장하는 파트타임보다 더 열악한 근로 조건이다. 2년 전인 2016년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 조사에서 제로아워 계약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젊은 여성은 전체 응답자의 32%였지만, 올해는 그 비율이 더 상승했다.

전 세계적인 미투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여성을 향한 성추행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직장 내 불이익이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않는 여성들도 6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내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한 뒤 제보한 여성들은 전체의 8%에 불과했고, 15%는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8% 여성 응답자가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두렵다”고 답했고, 24%는 “해고를 당할까봐”, 17%는 “근로 시간이 줄어들까봐 두려워 성희롱 신고하기 어렵다”고 털어냈다. 이와 함께 32% 여성들이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해 직장 내 성추행 제보 제도가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에서 성차별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과 관련, 대다수인 71% 여성이 “당한 적이 있다”고 했고, 여성 51%는 “그들이 40세가 됐을 무렵 영국에서 직장 내 성차별이 해결될 것”이라며 영국에서 지금 당장 여성을 향한 직장 내 성차별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위민스트러스트는 이 보고서에서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젊은 여성들이 젊은 남성들보다 고용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더 많이 겪으며, 직장 내에서 성추행과 차별 등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올해는 영국 여성들이 참정권을 쟁취한지 100주년 되는 기념비적인 해지만 양성평등을 향해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의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김연진 스웨덴 룬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지난 2014년 집권에 성공한 스웨덴 진보연합 정부는 세계 최초로 스스로를 페미니스트 정부로 명명하고, 외교에서도 페미니즘 가치를 내세워 전 세계를 상대로 양성평등 정신을 강조해 왔다. 지난 8월 23일 스웨덴 외교부는 일명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을 정리한 자료를 출간했다. 보고서에서는 지난 4년간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의 핵심 가치를 정리하고 스웨덴이 추구하는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는 2014년 마르고트 발스트렘(Margot Wallström)이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당시 발스트렘 장관은 스웨덴 정당 간 외교 정책 태도의 미미한 차이를 지적하며, 앞으로의 외교 정책은 페미니즘 가치를 중심에 둘 것을 약속했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측면을 강조한다. 권리, 대표성, 자원의 분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현실성이다. 이 네 가지 측면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① 인권의 최대 향유, ②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③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분쟁 이후의 평화 구축을 위한 참여, ④ 사회 제반 영역에 대한 정치적 참여, ⑤ 경제적 권리와 임파워먼트 증진, ⑥ 성과 생식 건강 및 권리 신장을 실행계획으로 수립하여 이행되었다.

다양한 정책들 가운데 올해 세계 여성의 날 진행된 위키갭(WikiGap) 행사도 눈여겨볼 만하다. 스웨덴 외교부는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Wikipedia) 콘텐츠 편집자의 90%가 남성인 사실에 주목했다. 많은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정보의 성 편향성 혹은 성 불평등은 쉽게 간과되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각지의 스웨덴 대사관들과 위키미디어 지부,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하여 에디터톤(edit-a-thon)* 이벤트를 기획했다. 스웨덴, 인도네시아, 이집트, 콜롬비아 등 약 50여 개국에서 1,600여 명이 30개의 언어로 본 이벤트에 참여했다. 첫 석 달 동안 여성과 관련된 콘텐츠는 약 4,000개 이상 증가하고, 해당 글의 조회 수도 총 5백 만을 넘어서었다.

긍정적인 남성성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눈에 띈다. 외교부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입장에 서서 양성평등 문화를 정책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한 예로 콩고민주공화국에 주재한 스웨덴 대사관은 UN Women과 함께 콩고 남성성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의 소년과 청년 남성에게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위한 소년 및 성인 남성의 역할'에 대한 에세이 경연, 진정한 남성(un vrai homme)이라는 주제로 사진 경연 등을 개최하였다. 2017년 한국에서도 개최되었던 스웨덴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진전 역시 페미니스트 외교의 한 일환으로, 이들은 강한 여성성에 대한 강조를 넘어 좀 더 긍정적인 남성성에 대한 문화적 담론 형성에도 앞장서 왔다.

그러나 스웨덴 외교부의 행보에 칭찬과 격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위키갭 행사의 경우, 이미 모든 전 세계인은 젠더와 상관없이 위키피디아에 글을 쓰고 편집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여성들을 불러 모아 글을 쓰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일부에서는 현 페미니스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과 과연 무엇이 다르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페미니스트 자체가 가진 부정적 어감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야 할 외교 분야에서 페미니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참고자료

- Sentencing Council(2018)
"Intimidatory Offences Definitive Guideline"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wp-content/uploads/Intimidatory-Offences-Guideline_WEB.pdf
(접속일자, 2018년 10월 11일)
- Local(2018, Aug 23)
How to get your own feminist foreign policy: Sweden launches handbook.
<https://www.thelocal.se/20180823/how-to-get-your-own-feminist-foreign-policy-sweden-launches-handbook>
- Nathalie Rothschild(2018, Mar 6)
Government's feminist Wikipedia project faces criticism.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2054&artikel=6897434>
- Sveriges Radio(2014, Oct 3)
Utrikesministern: "Ska föra en feministisk utrikespolitik."
<https://sverigesradio.se/sida/artikel.aspx?programid=93&artikel=5981612>
- Utrikesdepartementet(2018).
Handbok Sveriges feministiska utrikespolitik.
https://www.regeringen.se/4a4753/contentassets/25cdf346017489ca22bd55e74de22c4/handbok_sveriges-feministiska-utrikespolitik.pdf
- WikiGap 행사 홈페이지
<http://www.swemfa.se/wikigap/>

실제로 외교부 장관이 2015년 여성 인권이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민주주의와 처벌 제도를 직접 비판해 양국 간의 외교 갈등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스웨덴 외교부의 선구적 행보를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스웨덴의 한 교수는 스웨덴의 페미니스트 외교의 의의를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노력에서 찾기보다는, 외교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해준 데 있다고 보았다.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에 대한 격려와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곧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그동안 페미니스트 외교 정책 방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봐야 하겠다.

* 편집을 뜻하는 영어단어 Edit과 마라톤(Marathon)의 혼성어로, 사람들이 모여 특정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쓰고, 편집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스위스 SWITZERLAND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제안과 논의

곽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그동안 스위스에서는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 정책적 논의가 진행된 바 있는데, 올 하반기 스위스 가족정책위원회(Federal Commission for the Coordination of Family Affairs, COFF, 이하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책제언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 번 사회적 환기를 이끌어냈다.¹⁾ 이번 원고에서는 스위스 가족정책위원회의 육아휴직 관련 정책제언과 작년에 국민들이 직접 발의한 배우자출산휴가 도입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1995년 설립되었으며, 행정적으로는 내무부(Federal Department of the Interior, DFI)소속이다. 가족정책위원회(COFF)는 1년에 약 4-5회 모여 논의하고 가족정책 관련 정책적 입장을 표명한다.

위원회는 스위스 연방정부의 내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게 가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책 제언을 제공하는 자문위원회로, 노동, 사회복지, 교육, 법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다.²⁾ 지난 8월 20일, 위원회에서는 총 38주의 남녀 육아휴직 제도를 제안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여성은 14주, 남성은 8주 보장하고 나머지 16주는 양측 부모가 상의하여 서로 나눠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본 육아휴직안은 자녀 출산 이후 첫 3년 이내 사용하고, 일부 추가 요건을 마련 및 심사한 뒤 임금의 80퍼센트를 육아휴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스위스의 집합적 국가 원수체제이자 행정의사결정 조직으로, 의회 상·하원 의원에서 선출된 7명의 내각장관(임기 4년)이 연방평의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7명의 위원들 중 연방의회에서 매년 1명을 선출하여 1년 임기로 연방평의회 의장이자 스위스 연방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절반가량의 OECD 회원국들이 평균 최소 43주정도의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스위스가 다른 선진국들의 육아휴직 제도보다 뒤처져있다고 지적하면서, 부모의 육아휴직은 가족의 안녕과 양성평등 가치 실현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Reuters(2017)
"Back to work, dad: Swiss government opposes paternity leave,"
2017년 10월 18일자
<https://www.reuters.com/article/us-swiss-fathers/back-to-work-dad-swiss-government-opposes-paternity-leave-idUSKBN1CN26J>
(접속일자: 2018년 10월 14일)
- The Local(2017)
"Paternity leave initiative moves closer to public vote in Switzerland,"
2017년 6월 5일자,
<https://www.thelocal.ch/20170605/paternity-leave-initiative-moves-closer-to-public-vote-in-switzerland>
(접속일자: 2018년 10월 14일)
- The Local(2018)
"Government comes out against paternity leave proposal,"
2018년 6월 1일자
<https://www.thelocal.ch/20180601/government-comes-out-against-paternity-leave-proposal>
(접속일자: 2018년 10월 14일)

현재 스위스에서는 육아휴직^{parental leave}에 대한 법률 조항이 부재하다.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paternity leave}도 마찬가지이다. 여성의 출산휴가^{maternity leave} 부분만 헌법에서 여성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출산하는 경우 전일제^{full-time}, 시간제^{part-time}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여성은 최대 14주 출산휴가를 보장받으며 임금의 80퍼센트를 일일수당^{daily allowance} 형태로 지급받는다. 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개인의 고용형태나 기업에 따라 상이하긴 하나 대개 1일이나 2일 남짓의 휴가를 사용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가족정책위원회의 엘리사베스 쟀프^{Elisabeth Zemp} 의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위와 같이 제안한 육아휴직 제도가 실시될 경우 1년에 약 10~15억 프랑(한화 약 1조 7천억 원~1조 7천 5백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지만, 육아휴직 활성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약 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익 창출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부모 양측이 공유하는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 이직률^{staff turnover}도 낮아지고, 엄마가 된 여성이 출산, 자녀 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 사회적 손실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았다.

남성의 배우자출산휴가, 즉 부성휴가^{paternity leave}에 대해서는 작년에 스위스 국민들이 직접 발의한 바 있으며, 연방의회에 상정되어 있다. 본 발의는 스위스 노동조합 총연맹^{Travail Suisse}, 여성단체 Alliance F, 남성단체 ^{männer.ch}, 가족 관련 사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Pro Familia Suisse가 주도하여 남성의 자녀 출산 이후 1년 이내 4주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약 12만여 명의 스위스 국민들이 서명했다. 현재 본 발안은 의회에서 검토 중이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로서, 입법이나 정책 방향 안건에 대한 의무적 또는 선택적 국민 투표^{referendum}와 국민 발의^{popular initiatives}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치구조를 갖고 있다. 스위스 유권자 개인 또는 집단은 18개월 이내에 1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연방평의회^{Federal Council}에서는 작년 10월, 위와 같이 남성의 4주 유급휴가를 도입하게 되면 연간 약 4억 2천만 프랑(한화 약 49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하면서 이는 사회의 경제적 부담과 기업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연방의회에서 본 발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남성의 부성휴가는 고용주의 개별적인 결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부성휴가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에서 우선순위를 뒤야할 부분은 아동 돌봄과 같은 서비스 확대라고 언급했다. 이후 현재까지 연방의회에서는 아직 본 국민발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사실 이번 위원회의 공식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작년 국민 발의된 제안도 실제로 의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본 이슈에 대한 정책제안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으나, 제도적 성과로 연결될 때 보다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제도가 스위스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볼 만하다.

- The Local(2018)
"Switzerland's new 38-week parental leave proposal: what you need to know,"
2018년 8월 21일자
<https://www.thelocal.ch/20180821/switzerlands-new-38-week-parental-leave-proposal-what-you-need-to-know>
(접속일자: 2018년 10월 14일)
- The Swiss Authorities 공식 웹사이트, "Maternity leave,"
<https://www.ch.ch/en/maternity-leave/>
(접속일자: 2018년 10월 14일)

독일 GERMANY



약국과 연계해 도움 필요한 임산부 지원 확대

채혜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독일 통신원

- 독일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 독일 전역 약국과 연계해 이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8년 10월, 첫 캠페인이 시작된 곳은 베를린 노이켈른에 위치한 약국이다. 앞으로 임산부들은 동네 약국에서 어떻게 하면 익명으로 안전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청할 수 있다.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일 전역의 약국과 연계해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해 집중적으로 알리는 것은 ‘지원 전화Das Hilfetelefon für Schwangere in Not’이다. 무료 전화인 ‘0800-40-40-020’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전화 상담원은 지역의 임신 상담 센터를 통해 임산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를 위한 지원 전화는 독일에서 4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전화로 임산부는 익명으로 임신과 관련된 모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임산부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연관된 사람이나 관련 전문가들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임산부가 원할 경우 자신이 사는 곳에서 가까운 지역 임신 상담 센터와 연계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 상담은 아랍어, 중국어, 영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터키어 등 17개 외국어로 제공된다. 전화 외에도 지원 전화 웹사이트www.geburt-vertraulich.de에서 1:1 채팅과 이메일 등을 통해 익명으로 여러 임산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프란치스카 기파이Franziska Giffey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장관은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에게 지원 전화에 대해 알리는 것은 중요하므로, 우리는 약사와 독일 연방 약사 협회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번 달부터 독일 전역 약국의 정문에 이와 관련한 정보와 스티커 등을 부착해 더 적극적으로 임산부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긴급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은 2014년 5월 1일 시행된 ‘임산부 지원 확대 및 기밀 출생 규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주로 지원하는 대상은 위험 상황에 놓여 있거나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임산부다. 이 법안에 따라 독일 임산부는 익명으로 상담 받을 권리에 대한 정보와, 임신 사실을 기밀로 하려는 여성을 위한 상담 센터 접근 방법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이 법안에 따라 연방 정부는 지원 전화0800-40-40-020설치, 운영해 여러 분쟁이나 갈등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위해 상담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관련 상담센터와 임신 갈등 상담센터Schwangerschaftskonfliktberatungsstellen에서도 익명으로 상담과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임산부를 위해 여러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 임산부 지원 전화 웹사이트
<https://www.geburt-vertraulich.de>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발표 자료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presse/pressemitteilungen/start-der-apothekenaktion-zur-bekanntmachung-des-hilfetelefonsschwangere-in-not-/129638>



온타리오 초등학교 성교육 교과 과정 개정 관련 논쟁 격화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온타리오의 초등 성교육 교과 과정 전면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주정부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당선된 보수당의 덕 포드(Doug Ford) 신임 온타리오 주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 전임 캐슬린 윈(Kathleen Wynne) 자유당 정부에서 2015년 도입한 성교육 교과 과정을 전면 폐지하고 1998년 전으로 회귀할 것을 발표했다.

- 2015년 도입된 성교육 교과과정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신체 부위에 대한 정확한 명칭을 가르치고, 책임 있고 안전한 성관계를 위해 성관계 시 쌍방의 동의(consen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의 성, 다양한 성 정체성과 젠더 표현, 동성 결혼, 온라인 성폭력 등에 대한 내용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과 특정 종교 집단들이 이러한 내용이 초등학교생들에게 적절치 않으며 공교육이 되려 학생들의 성적 방종을 부추긴다며 반발해 왔다.
- 주정부가 제시한 1998년 안과 유사한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던 동성애와 동성 부모로 이뤄진 가족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고 초등학교 6학년 과정에서 젠더 표현(Gender expression)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며, 8학년 과정에서는 이분법적 젠더를 넘어선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 다양한 젠더 스펙트럼과 이들의 정체성, 성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배제됨으로써 다양한 성적 지향과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지 않게 된다.

덕 포드 수상이 1998년 성교육으로 돌아 갈 것을 발표하자마자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여 8월부터 시위와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및 각종 집단행동이 줄을 잇고 있다. 제일 먼저 주정부의 조치에 반발한 것은 성소수자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8월 트랜스젠더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교과과정에서 전면 삭제되는 것은 마치 아이들에게 성소수자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그러한 성향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성소수자 학생들로 하여금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교내 따돌림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성애자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한 안전한 성관계에 대한 정보를 공교육을 통해 얻는 반면 성소수자 학생들은 그러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므로 주정부의 개정안은 명백한 성소수자 배제이며 차별이라는 요지로 주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이어 캐나다 최대의 교원 노동조합인 온타리오 초등학교 교원 노동조합(The Elementary Teachers Federation of Ontario)과 시민사회 연대 조직인 캐나다 시민 자유협회(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도 법정투쟁에 나섰다. 주정부의 개정안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 한다는 요지로 소송을 제기한 캐나다 시민자유협회에 뒤이어 8월 온타리오 초등학교 교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학생들을 1998년이 아닌 2018년의 세상에 대비 시킬 필요가 있다” 라며, 포드 정부의 개정안은 소수자 학생들의 인권(the Charter rights of minority student)과 교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요지로 소를 제기했다. 교원노조에 따르면 현장의 교사들은 전문가들에 의해 개발되고, 학부모들과 가톨릭 교육계가 찬성한 최신의 증거 기반 성교육 교과 과정을 가르치도록 훈련받았는데, 주정부의 개정안은 학생들의 건강에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교사들을 강제함으로써 정부가 교사들의 전문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는 또한 개정안을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자료

- Canadian Civil Liberties Association, Taking the Fight for Inclusive Sex-education in Ontario to the Steps of Queen's Park <https://cccla.org/taking-fight-inclusive-sex-education-ontario-steps-queens-park/>
- HuffPost,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Joins Legal Challenge Of Sex Ed Repeal https://www.huffingtonpost.ca/2018/10/09/ontario-human-rights-commission-joins-legal-challenge-of-sex-ed-repeal_a_23555717/
-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OHRC intervenes in education curriculum case at the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http://www.ohrc.on.ca/en/news_centre/ohrc-intervenes-education-curriculum-case-human-rights-tribunal-ontario
- The Star, Tens of thousands of high school students walk out en masse to protest out-of-date sex-ed curriculum, <https://www.thestar.com/news/gta/2018/09/21/tens-of-thousands-of-high-school-students-walk-out-en-masse-to-protest-out-of-date-sex-ed-curriculum.html>

신체적, 성적 폭력, 성병, 온라인상의 따돌림과 성폭력, 온라인 아동 착취(cyberbullying and online child exploitation) 등과 같은 변화된 환경과 새로운 위험에 대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의 인권 위협하고, 성소수자(LGBTQ+) 학생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관련된 주제들을 교과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들을 “비정상”으로 낙인찍으므로 이는 성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차별임을 주장하고 있다. 뒤이어 9월에는 학생들 스스로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무지는 그만, 혐오도 그만, 98년도로 돌아가지 말자”(No ignorance, no hate, let's not go back to '98)라는 구호를 외치며 온타리오 전역의 75개 학교에서 약 3만 8천명의 학생들이 토론토 시내 거리 행진과 집회에 나섰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한 캠페인 또한 확대되어갔다.

이처럼 성교육 개정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10월 9일 화요일 온타리오 주 인권위원회(OHRC: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s)가 공식적으로 법률 공방에 개입할 것을 발표했다. 온타리오 인권위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소녀들과 성소수자 학생들은 온타리오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집단(most vulnerable and at-risk people)이라는 경험적 증거들을 언급하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온타리오 인권조사위원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에 청구되어 있는 사안의 심판에 개입할 것이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공식 성명에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괴롭힘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주정부의 개정안은 특히 성소수자 학생들과 그 부모들을 사회적으로 낙인찍고 격하하며 고립시킨다(stigmatizes, degrades, and alienates LGBTQ+ students and parents)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는 또한 온타리오의 모든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모습을 정규교과 과정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성(diversity)과 포용적인(inclusive) 교과과정과 인권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남과 여, 그리고 X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캐나다의 노바스코시아주(Nova Scotia)는 앞으로 성정체성을 남성 또는 여성의 이분법적 범주로 정의하고 싶지 않은 개인은 남/여가 아닌 제 3의 범주 “X”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19일 노바스코시아 주정부는 출생증명서에 관련한 법률(Vital Statistics Act)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개정 전에도 노바스코시아주는 개인에게 출생증명서상 성별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이는 오직 성전환을 한 경우 등 전문가의 소견서가 뒷받침 될 때에 한해 가능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생증명서의 성별을 변경하는데 전문가 소견서가 요구되지 않을 것이며, 출생증명서 상의 성별을 바꿀 때 부과하던 요금(24.95 캐나다 달러) 또한 사라질 것이다. 19일 서비스 노바스코시아(Service Nova Scotia)의 맥렐란(Minister Geoff MacLellan) 장관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발표하면서 더 포용적인(inclusive) 노바스코시아를 만들기 위한 올바른 행보(right thing to do)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로서 노바스코시아는 캐나다에서 온타리오(Ontario), 뉴펀드랜드와 라브라도(Newfoundland and Labrador), 알버타(Alberta), 유콘(Yukon),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와 더불어 공문서상 X라는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주가 되었다.

노바스코시아의 이번 결정은 최근 캐나다에서 보이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포용하는 흐름의 한 예이다. 현재 사스카추완(Saskatchewan)과 온타리오(Ontario)주는 출생증명서에 성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며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캐나다 여권의 성별 표기란에는 남녀 외에 X를 허용하고 있다. 2017년 캐나다 이민청은 모든 캐나다인이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젠더를 표현하며 살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위험도 없어야 한다면, 여권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은 성 정체성과 젠더 표현에 상관없이 모든 캐나다 시민은 평등해지기 위한 중요한 조치임을 강조한 바

참고자료

- HuffPost, Nova Scotia To Offer Gender-Neutral Option On Birth Certificates
https://www.huffingtonpost.ca/2018/09/19/nova-scotia-gender-birth-certificate_a_23532817/
- CBC, Ontario has just issued its first non-binary birth certificate, recipient says
<https://www.cbc.ca/news/canada/toronto/ontario-has-just-issued-its-first-non-binary-birth-certificate-recipient-says-1.4652175>
- Government Canada, Change the sex on your passport or travel document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canadian-passports/change-sex.html>
- The Guardian, Canada introduces gender-neutral 'X' option on passports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8/oct/01/canada-introduces-gender-neutral-x-option-on-passports>

있다. 당시 여권 성별란에 X를 표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체를 반대하는 캐나다 내부의 반발 뿐 아니라 남녀 외에 제 3의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 미대륙에서도 다른나라를 여행할 때는 통용되지 않는 무의미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현재 캐나다 이민청은 다른 나라에 입국시 캐나다 여권에 표시된 성별 X 때문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니 여행하는 국가의 상황을 살펴 선택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최근 이렇게 연방 및 주정부들이 X를 공문서에 도입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 LGBT 인권운동계는 비이분주의자^{non-binary}, 인터섹스^{intersex}, 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진 캐나다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일차적인 문제를 공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공문서에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성별란을 굳이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없애자는 의견 또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성 정체성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인정되고 있지 않고 심지어는 불법인 만큼 X를 사용하는 포용적인 체계를 국제적으로 널리 전파하는데 캐나다가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하튼 캐나다 내에서 X선택지는 당분간 여러 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온타리오주는 기존에 운전면허증과 의료보험증에 X선택지를 채택해오고 있으나 출생신고서에서 만큼은 남녀의 이분 범주를 고집해 왔는데, 2017년 영화감독 퍼거슨^{Ferguson}이 토론토의 서비스 캐나다에 여성으로 표기되어 있는 자신의 출생신고서상 성별^{sex designation}을 비이분주의자^{non-binary}로 바꿔줄 것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주정부를 상대로 한 1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올해 5월 온타리오주 최초로 X가 표기된 성 중립적^{gender neutral} 출생 신고서를 획득한 바 있다. 퍼거슨 케이스를 계기로 곧 온타리오에도 노바스코시아와 같은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7/aug/31/canada-introduces-gender-neutral-x-option-on-passports>
- Nova Scotia Canada, Change Your Sex Designation
<https://novascotia.ca/sns/access/vitalstats/changing-your-sex-designation.asp>